

사 램 사 랑

회원통신 제39호(98/3/18)

인 권 은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chollian.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특별기고>

배신당한 기대, 3.13 조치의 기만성

권오현(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

74명의 양심수가 풀려났다.

550만명이 넘는 '사상최대' '건국이래 최대사면' 에서 구차하게 묻혀나온 숫자다. '국민화합'과 '민주재도약 조치'라는 취지나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주발전에 동참할 것'을 바라는 사면권자의 뜻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몇몇 이름있는 사람으로 양심수 사면을 부풀려 위장해낸 흔적 뿐이었다. 민주주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지난날 개발독재에 대한 한계를 역설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을 다짐한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남아 있는데 진정 그 실천의 첫 단계에서부터 단추를 잘못 잠고 있었다. 수십년 정치적 박해를 받아오며 오랜 인고의 민주장정을 해온 당사자였기에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신념이 남다르리라 믿었던 일마저 배반당한 꼴이 됐다.

첫 단추부터 잘못 잠귀

많은 사람이 50년만의 정권교체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말하였다. 그것은 여,야 정권교체를 넘어 반세기를 짓눌러온 외세와 분단, 독재와 독점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기도 했다. 자유와 민주주의, 자주와 통일, 정의와 평화를 위해 독재와 맞서 싸우다 죽어갔거나 감옥간 이들에 대한 재평가와 올바른 자리매김은 무엇보다 앞서 할 일이었다.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의 가시적 조치로서 양심수사면에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배신으로 돌아왔고 실망을 넘어 분노로 치닫게 했다.

이른바 '공안사범'으로 분류되어 석방된 74명은 전체 양심수 478명(98.3. 현재) 중 15%에 지나지 않았다. 그 가운데 48명은 형기 75%를 넘긴 사람이고 16명은 94%를 살았다. 두사람은 겨우 4일을 남겨둔 이들이다. 바로 숫자를 채우려는 흔적이 뚜렷하다. 다른 한편 형기 2/3 이상을 산 사람이 50명이나 빠졌고 만기 9일을 남긴 사람, 형기 97.6%를 산 사람도 빠졌다. 잔형면제(60명), 형선고실효(53명), 감형(16명), 복권(711명), 사면 및 복권(519명), 형집행정지(11명), 가석방(3명)자 모두를 합쳐서도 1,373명 뿐이다. 이는 김영삼 정권 출범 때의 석방자 144명(28%)의 절반 수준이고 전체 사면자 5,283명에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노태우 정권 출범 때의 1,731명에도 못미치는, 이른바 '국민의 정부' 출범 사면으로서는 지우지 못할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노태우, 김영삼 정권보다도 못해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사면대상자의 형기나 죄명을 따지지 않고 재범하거나 국가전복활동을 기도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정했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체제전복세력과 전향(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마치 공안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상투적으로 쓰는 양심수에 대한 체제전복 세력으로 몰고가는 냉전과 공안논리 그대로였다. 동, 서 냉전시대가 사라지고 정의와 평화, 인권의 세계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오늘, 더구나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를 몰각한, 이러한 시대역행적 낡은 논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민주주의 발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앞서의 독재정권들이 주장한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3.13 사면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 몇가지를 밝히면서 빠른 시일안에 양심수 전원석방을 비롯한 사면, 복권이 있길 촉구한다.

첫째, 형기에 관계없이 70세가 되지 않았다하여 석방에서 빼버린 조치다. 40년을 복역한 우용각 노인을 비롯하여 넬슨 만델라(27년 복역)보다 더 오래 갇혀있는 장기구금 양심수들이 65-69세에 이르고 고문후유증과 갖가지 질환을 앓고 있지만 70이 안되어서 제외되었다. 이분들이 어렸다는 실정법 자체의 부당한 적용은 말할 것도 없고 70세까지는 갇혀있어야 한다는 이 나라 행형제도의 반이성적, 반인간, 반인륜적 행태가 부끄럽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역행적인 공안검사의 낡은 논리

둘째, 한총련 등 학생단체와 민간통일운동단체, 그리고 민주와 통일 사회진보를 위해 헌신해온 인사들을 체제전복세력으로 보는 잘못이다. 그들은 역사와 민족,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를 민족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의사 표현을 했을 뿐이다. 학생들이 젊고 순박한 눈으로 불의를 고발하고 나라 장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

는 것은 건강한 비판세력으로 받아 안아야 할 일이지 이적으로 몰아 탄압해선 결코 안될 일이다.

셋째,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문제이다. 전향을 하지 않았다 하여 장기구금 양심수를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건 관련자들에 차별적 조치를 한 것은 인권 개념에 대한 초보적 상식도 없는 행패이다. 사상, 양심의 자유는 이 나라 헌법에도 보장된 국민기본권이며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정신이기도 하다. 사상전향제도는 이른바 '좌익수'들을 공산주의 또는 불온사상을 가진 자로,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그 사상을 포기하고 반성하며 체제에 열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문서화하여 '전향심사위원회'에서 심사케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행위다. 더구나 비전향 장기구금 양심수들은 이념이나 사상을 추구하는 사상범이 아니라 갈라진 나라를 하나 되게 하려는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하지 않는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또한 전향(반성)을 하지 않았다 하여 같은 사건에서도 차별적 조치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전근대적 사고로 당장 고쳐야 할 일이다.

넷째, 미결이라 하여 사면대상에서 제외시킨 부분이다. 양심수 사면은 유무죄를 가리는 법정 심리가 아니다. 노태우 정권 때(88. 12. 21) 기결수는 조건없이(선별 없이) 특별사면 특별복관으로 석방했고, 수사중인 30명은 검찰이 구속취소, 재판 중인 123명은 법원이 구속취소하여 모두 석방했다. 또한 수배자의 수배해제 조치도 당연히 있었다.

같은 사건도 전향 여부로 판단하다니

끝으로 양심수 사면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진보 그리고 정의와 평화, 인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정당국이 달마다 하는 행형성적 등의 가석방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이다. 양심수 대폭 사면 약속을 옹기 실천 못한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과연 민주개혁에 얼마만큼 성과를 올릴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한다. 3.13 사면조치는 민주세력에 대한 배신이다. 양심수 전원석방을 비롯한 사면, 복권, 수배해제를 당장 실시하라!

꾸준히 회비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봉하는 지로는 25일이 넘어도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좌 안내>

농 협: 011-01-404581 국 민: 015-21-0723-021 우체국: 013292-0011731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

사 / 업 / 보 / 고

(98년 2월 셋째주부터 3월 둘째주까지)

전국 교도소 앞 설문지 배포

3월 13일, 행형실태조사설문작업 시작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도(구치)소 인권실태조사작업이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측과 공동으로 3월 13일 특사에 맞춰 전국 교도소, 구치소 25곳에서 설문지와 반송용 봉투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날 전국적으로 배포한 설문지는 약 1천부 정도가 됩니다. 두 단체는 지역의 친분이 있는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미리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중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설문지 배포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두 단체는 오는 4월 15일까지 1차로 조사작업을 마치고, 오는 부처님 오신 날과 8월 15일에도 설문지 배포 작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각 단체와 교회 쪽의 재소자 또는 출소자 관련조직을 활용하여 8월 15일까지 설문지 작업을 벌이게 되며, 출소자들에 대한 개별 인터뷰 작업을 진행하여 이를 근거로 교도소와 구치소의 인권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심찮게 언론에 등장하는 재소자 사망사건이나 불법적인 징벌 등 아직도 인권이 자리잡을 틈조차 없는 인권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사랑방의 사무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성된 설문지는 지금까지 나온

어떤 설문지보다도 치밀하게 22개 주제에 따라 각 주제당 10여개 안팎의 항목을 만들어 설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95년 현행 행형법이 시행된 이후로 처음 실시되는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후진적인 행형실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감옥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자문위원들께서 이후 진행될 분석작업 및 대안마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의 담당자는 엄주현 씨입니다.

운영위원회, 조직 재편 결정

지난 2월 27일 오후 6시 운영위원회가 모처럼 열렸습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서준식 대표, 곽노현, 김동한, 장호순, 윤기원 운영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그간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재편에 대한 권한을 서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에 따라 서대표는 조직 재편 방향에 대한 구상에 들어갔으며, 이와 더불어 사랑방의 사업방향, 사무국 재편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중입니다. 한편, 사무국에서도 지난 겨울에 논의한 바 있는 조직 재편 및 사업방향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루소식 시평 필진 활동가로 구성

인권하루소식 시평 필진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오창익(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남규선(민가협 총무)와 함께 박래군 사무국장이 필진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시평을 쓰게 됩니다. 이번 필진은 연령을 대폭 낮추었고, 인권단체 활동가들만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활동가들의 패기있고 현장감 있

는 목소리를 신졌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비록 미숙한 점이 많더라도 관심있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모임 구성

3월 17일 첫모임, 대표 선출

사랑방에서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나와 자원봉사를 하는 이들이 모여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오후 6시 회의실에서는 사무국이 마련한 자원봉사자들과의 만남시간에는 총 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무국에서 준비한 음식과 술을 나누면서 5시간 가량 진행된 모임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표로 배경내(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이영태(서울대 조선공학과 졸업)씨를 선출하였습니다. 두 명의 공동대표가 각기 총무와 연락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한달에 1회씩의 자체 모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랑방 사무국의 업무 보조 형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에 주체로 적극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은 두 대표를 비롯해 이상준, 심혜진, 김현정, 권태평, 김연진, 박주희, 성동철 씨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원봉사자로는 만화, 번역, 미술, 편집, 컴퓨터 통신 등을 지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모임은 이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인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의 사업에 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 3월 21일 봄맞이 대청소

사무국은 21일 봄맞이 대청소를 하면서

사무실 구조를 새롭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간이 비좁아 회의실에 있던 김동한 교수(운영위원)의 짐을 정리하여 창고에 맡겼습니다. 이번 대청소를 끝내면 훨씬 더 깨끗할 뿐만 아니라 사업단위 중심으로 책상 배치가 이뤄져 업무 추진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권협 집행위원회 열려

인권협은 3월 5일 오후5시 민변 회의실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결정을 미룬 대표단체와 간사단체의 이월 문제를 논의한 바 대표단체로는 민가협, 간사단체로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맡는 것으로 하고, 각 단체의 확인을 거쳐 차기 집행위원회에서 결정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심수 사면복권 조치를 지켜보고 이에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집행위원회가 끝난 뒤에는 곽노현 교수(사랑방 운영위원, 방송대 법학과)를 초빙하여 국민인권기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두산정보통신이 운영하던 인터피아가 두산의 사업철수로 아이넷으로 옮겨졌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인터넷 E-mail은 앞으로 천리안의 주소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천리안 E-mail 주소는 rights@chollian.net입니다. 한편, 사무국에서는 홈페이지 주소 이전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 지난 13일 가지려던 서대표 공대위 해산 모임 갖지 못했습니다. 그날 마침 특사가 있어서 각 교도소로 사랑방과 인권단체들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시 일정을 잡아 해산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대표 자료집은 서대표 본인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 이를 내지 않기로 하였고, 대신 디스켓 파일로 필요로 하는 분께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3.13 특별사면 석방, 감형 양심수 명단

순위	성명	사건명	조치	비고
1	강남운	한총련 출범식	잔형집행면제	
2	강동화	일심단결회	잔형집행면제	잔형 3개월
3	강석현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4	강성모	노진추	잔형집행면제	
5	강정희	분향소 관련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6	고영기	공산주의자연합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반
7	권유신	96서강대총학생회장	잔형집행면제	
8	김광수	노진추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미만
9	김문근	송당마을 강제철거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10	김선태	공산주의자연합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반
11	김성식	계급투쟁동맹	잔형집행면제	잔형 3개월
12	김승기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잔형 5개월
13	김시홍		잔형집행면제	
14	김연석	서울시립대 총학부회장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15	김영	방북	잔형집행면제	*김하기
16	김용기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17	김우형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잔형 5개월
18	김재호	사학연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미만
19	김희영	경희대 총학 부회장	잔형집행면제	잔형 4일
20	남승균	96 인부총련 의장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미만
21	문순덕	계급투쟁동맹	잔형집행면제	잔형 5개월
22	문중권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23	문치웅	서총련 중집	잔형집행면제	잔형 2개월
24	박경근	광주대총학생회(94)	잔형집행면제	잔형 5개월
25	박광순	시위	잔형집행면제	
26	박성동	외대 총학생회장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27	박세화		잔형집행면제	
28	박용모	회합, 통신	잔형집행면제	*진관스님
29	박종익	시위 주도	잔형집행면제	
30	반호진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31	방진옥	사민청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미만
32	백주선	중앙대 총학생회장	잔형집행면제	
33	서경원	방북	잔형집행면제	
34	서다윗	서총련 중집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35	선정우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36	성두현	노진추	잔형집행면제	
37	송진환	남총련의장(92)	잔형집행면제	잔형 1개월 미만
38	신성필	서총련 중집	잔형집행면제	
39	양승호	노진추	잔형집행면제	
40	양연수	아암도 철거반대	잔형집행면제	
41	양준석	노진추	잔형집행면제	
42	양희선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잔형 3개월
43	오동욱	서총련 중집	잔형집행면제	
44	우한철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45	유지봉	충북총련 중집장	잔형집행면제	
46	윤영광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잔형 5개월
47	윤정민	통일중공업 노조	잔형집행면제	잔형 2개월

48	이남영	국제사회주의자사건	잔형집행면제	
49	이영원	단국대 학내시위	잔형집행면제	
50	이종철	고려대 총학생회장	잔형집행면제	
51	이철희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52	이혁재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잔형 5개월
53	정명아	국제사회주의자사건	잔형집행면제	잔형 2개월
54	정양덕	활동가조직 사건	잔형집행면제	잔형 2개월
55	조봉호	노진추	잔형집행면제	
56	최익환		잔형집행면제	
57	최인기	사민청	잔형집행면제	잔형 6개월
58	최창근	민정연 사건	잔형집행면제	
59	탁귀영	국민대 총학 부회장	잔형집행면제	잔형 2개월
60	황영호	한국합섬노조	잔형집행면제	잔형 2개월
61	강재우	범민련사건	형집행정지	*강희남
62	김병권	범민련사건	형집행정지	
63	김병주	재일교포사건	형집행정지	
64	김인수	남파사건	형집행정지	
65	박창희	일본관련	형집행정지	
66	신인영	남파사건	형집행정지	
67	윤수갑	남파사건	형집행정지	
68	윤용기	남파사건	형집행정지	
69	전창일	범민련 사건	형집행정지	잔형 6개월
70	최하중	남파사건	형집행정지	
71	홍경선	남파사건	형집행정지	
72	손유형	재일교포사건	가석방	
73	유정식	일본유학관련	가석방	
74	황석영	방북	가석방	

<감형자 명단>

75	강희철	일본관련	감형	
76	김성만	구미유학생사건	감형	
77	김정목	납북어부	감형	
78	남진현	사노맹사건	감형	
79	박동운	행방불명자가족사건	감형	
80	박수관	재일교포사건	감형	
81	심금섭	남한조선노동당	감형	
82	안승윤	행방불명자가족사건	감형	
83	양동화	구미유학생사건	감형	
84	유재선	일본관련	감형	
85	이장형	일본관련	감형	
86	이재익		감형	
87	정 영	납북어부	감형	
88	황대권	구미유학생사건	감형	
89	황인오	남한조선노동당	감형	
90	황인욱	남한조선노동당	감형	

98년 2월 재정보고
(98년 2월 16일 - 3월 15일)

전기이월: -2,246,577원

수 입		지 출	
회비	1,857,100	활동비	3,270,000
구독료	3,462,600	발송비	546,640
사업수익	502,120	사무비품비	19,200
후원금	1,259,800	사무실유지비	805,630
기타	135,900	간행물구독료및자료구입	122,800
		식대및 부식비	289,600
		통신·전화비	768,920
		사무기기	22,000
		복사비	296,570
		기타	251,300
수입총액:	7,217,520원	지출총액:	6,392,660원
최종결산:	-1,421,717원		

<2월 자문·운영위원 회비>(가나다 순)



97년 재정보고
(97년 1월 16일 - 98년 1월 15일)

(각 항목은 월 평균액수입니다.)

수 입		지 출	
회비	2,223,042 (27.8%)	활동비	3,655,833 (44.8%)
구독료	2,743,860 (34.2%)	발송비	613,668 (7.5%)
사업수익	782,965 (9.8%)	사업비	337,356 (4.1%)
후원금	931,564 (9.8%)	사무비품	254,891 (3.1%)
기타	1,311,932 (16.4%)	사무실유지	770,123 (9.4%)
		자료구입	196,316 (2.4%)
		식대(야근)	260,382 (3.2%)
		전화요금	888,221 (10.9%)
		사무기기	474,125 (5.8%)
		복사비	267,993 (3.3%)
		기타	449,348 (5.5%)
평균수입:	7,993,363원	평균지출:	8,168,256원
수입총액:	95,920,356원	지출총액:	98,019,072원
월 평균잔액:	-174,893원		
최종결산:	-2,098,713원		